



경제 활성화 대책 설명하는 최 지사 최문순 지사(왼쪽부터)와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장, 경기정 강원산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 취약계층 30만명에 40만원씩 긴급지원

### 도 코로나 경제 피해 대책 추경예산 1,670억원 편성 소상공인·실직자 등 대상

속보=강원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는 긴급 추가경정(본보 지난 13일자 1면 보도)을 편성, 다음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4~8·10~16·20~23면

최문순 지사는 17일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 추진 기자회견을 열어 “1,67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 도민 생활 안정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관광 활성화 여건 마련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비 1,200억원을 투입해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5대5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중인 ‘재

난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특정계층에게 일회성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고용불안·소득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만8,000명과 실업급여 수급자 등 2만7,000명, 기초연금 수급자 19만5,000명 등 총 30만명 정도다. 도는 조만간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 주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도 기존 7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증심사 기간을 4주에서 2주까지 대폭 단축한다. 또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1위 숙박 관광 앱 ‘아놀자’와 협업해 숙박 객실료 50% 할인을 추진한다. 최문순 지사는 “도의회와 시·군, 금융기관, 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빠르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 재정상황에서 추가 부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힐찬새 출발 기회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 소상공인·실업급여 수급자 등 혜택... 사각지대 박탈감 우려

〈매출액 7000만원 이하〉

## ■ 생활안정지원금 누가 받아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찬반여론이 뜨거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방식, 심사 기준 및 수요 조사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 ■ 지급대상 범위 선정

17일 발표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보면 도내 소상공인 중에서는 전체 12만명 중 매출액 7000만원 이하의 7만800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1만9000명, 청년구직자 4000명, 경력단절여성 4000명, 기초연금수령자 16만8000명, 차상위계층 1만3000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령자 1만2000명, 한부모가족 2000명 등 경제여건이 취약한 계층으로 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정부 추경예산 지원사업 대상자인 아동수당·청년수당 수급자도 제외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도 제외됐다. 다만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

도·10년 상환 조건 개발기금 용자

재난기본소득 개념 1200억 투입

"형평성 문제 없도록 규정 준수"

시·군 재량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사업자로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간 직장내 무급휴가자, 일용직 종사자 등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도관계자는 "1인당 40만원의 금액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규모"라며 "자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지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지급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매출액 7000만~1억원 규모 자영업자는 도내 9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고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어 해당 소상공인까지는 지원규모 확대 가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 지급 방식 시·군 재량

1인당 4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군 재량으로 현금과 강원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강원상품권 10% 특별할인 등 지역상품권 할인 캠페인을 활용하면 최대 1320억원의 지역소비 촉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강원연구원 등 전문가 조언을 통해 역외유출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도 70% 이상의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신청이 몰릴 경우 자칫 병목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등에 매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과 관광지 행정 구역의 신청솔림 현상 등도 우려된다.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이 소비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면 1200억원의 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도민 모두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경제활성화에 주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재원 지역개발기금 용자

빠듯한 강원도 살림살이인 만큼 지원금 재원 출처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도 크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효과에 대해서는 도내 경제단체·소상공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1200억원에 대한 재원 규모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12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5년 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10년간 자체 추진하는 1만5000여개의 각종 사업 중 예산 효율성과 행정비용을 따진 구조조정을 단행해 해당 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다.

최문순 지사는 "현재 강원도의 채무액은 2041억원 규모로 새롭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하나의 큰 사업을 없애면서 1200억원을 마련하기보다는 사업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남은 예산들을 모아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건협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 본격 가동

# “애로·건의사항, 정부에 적극 건의... 후유증 최소화할 것”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 회장(사진)은 17일 “건설현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현장의 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 회원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 곳곳에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협이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공사를 멈춘 현장은 30곳

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사중단 현장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 계약 업무처리지침’과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며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 탓에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둘러싸고 발주기

관과 건설사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고, 지체상금 등을 놓고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체상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 및 자재 수급도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도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차질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코로나19로 공기가 지연되며 발생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은 물론 인력·자재 수급 등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현장의 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계약업무처리 과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건설업계가 보다 능동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발주기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애로사항은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회원사들이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남기자 knp@